

“무리한 지방채 발행, 후손에 부담”

도의회 예결특위, 예산심사 관련 현안 질의서
“계획안 수립해 의회와 사전 협의 필요” 당부
기금 활용방안 등에 대한 검토 필요성도 언급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수, 고창1)는 지난날 28일부터 이달 12일까지 전북자치도 및 전북교육청 '2025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과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전북자치도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7,011억원 증액된 10조6,919억원, 전북교육청은 본예산 대비 710억원 증액된 4조5,732억원 규모로, 지난 21일부터 26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 예산안 예비 심사를 마쳤고, 29일 오후부터 행정부지사의 제안설명 청취 및 도정 현안에 대한 정책질의회를 시작으로 예결

위 심사에 본격 돌입했다.

이날 정책질의회에서 정중복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3)은 지방채 발행에 대해 묻고, “어려운 재정여건이 지속될 것이 예상되는 데 매년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며, “기금 관리에 있어 목적에 맞는 운용과 철저한 관리를 통해 낭비 요인을 방지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것”을 당부했다.

오은미 의원(진보당, 순창)은 세수 결손으로 인해 전북자치도의 재정 악화가 예상되는 상황이지만, 내년 예산 편성에 있어 깊은 고민이 부족한 것을 언급하며, “사회적 약자를 위한 배려

와 예산 반영이 미흡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명하고, 어려운 도민의 삶을 꼼꼼히 챙길 것”을 당부했다.

황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제2)은 2025년도 예비비가 전년도 대비 증액된 사유에 대해 묻고, “지방채까지 발행하는 어려운 재정 상황에서 과도한 예비비 증액 편성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정린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원1)은 예산안 공개와 관련하여 “타시도의 경우 사전에 도민들에게 예산안에 대해 파일을 공개하여 도민의 알권리와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전북자치도도 사전에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지방채 발행과 관련해 “무리한 지방채 발행은 후손에게 부담을 주는 것”이라고 말하고, “지방채 발행을 염두에 두고 편성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며, 재원확보에 대한 노력이 안 보인다”고 질타했다.

이어 “지방채 발행 계획안을 수립해 도의회와의 사전에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리고, 성과계획서 작성은 체계적인 예산편성을 위한 것인데, “형식적인 제출에 그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며, 정확한 성과목표가 작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군산3)은 지방채 발행도 문제지만, “집행잔액과다 등 재정 운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은 문제”라며, “특히, 미추진사업이 많은 것은 예산 편성단계부터 검토가 이뤄지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영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익산3)은 지방채 발행과 관련해 지역개발 기금을 활용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묻고, 순세계잉여금, 기금 등으로 여유자금 확보를 위한 것인지 의문이라며, 기금 활용방안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재정자립도와 관련해서는 의무지출비율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자립도가 낮은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특별자치도 특례를 통해 각고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심사 시작에 앞서 김성수 위원장은 “최근 전국적으로 세수 부족에 따른 세출 구조조정 등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예산안이 꼭 필요한 사업에 적절하게 편성되었는지 더욱 철저히 심도 있게 심사할 것”이라며 강한 의지를 밝혔고, “민생경제 안정화와 도정 핵심사업 등에 재정이 고르게 투자되었는지, 세입추계는 적정한지, 전심성·남비성 예산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은지를 도민의 입장에서 꼼꼼히 살피겠다”며, “이를 통해 건전한 재정운용의 토대를 마련하고 도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만호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 심사가 진행되고 있는 지난날 29일, 도의회 예결위원들이 행정부지사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있다.

도내 대학생들도 尹 정권 퇴진 시국선언 “이 정권 아래 청년 미래 없다”

“민생 파탄의 정점에 올라”

전북 지역 대학생들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청년의 미래를 맡길 수 없다”며 윤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에 나섰다.

전북윤석열퇴진대학생행동은 지난날 29일 전주대학교 정문 앞에서 ‘윤석열 정부 퇴진! 전북지역 대학생 시국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청년들이 어떤 삶을 살고 어떤 고민을 가지고 어떤 두려움 앞에 서있는지 전혀 고려하지 않는 정부를 끌어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자리에 모인 학생들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2년7개월이 됐지만 김건희 여사와 자신의 측근에게 제기되고

있는 문제는 모두 무혐의와 불기소 처분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그러면서 청년 피해자가 다수인 전세사기 특별법, 노동자를 위한 노란봉투법, 농민을 위한 양곡관리법 등 서민을 위한 법에는 모두 거부권을 행사하며 민생 파탄의 정점에 올랐다”고 주장했다.

전주대에 재학 중인 백모(24·여)씨는 “윤 정부가 들어선 2년 반 동안 대한민국은 초도화가 됐다. 한국 정부가 맞는지 의심스러운 정도의 친일적 태도에 역사를 전공한 저로써 정말 많이 부끄러웠다”며 “또 민생 관련 법안 거부권 행사로 인해 각 지방 지역은 직격탄을 맞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에게 필요한 것은 외면하



전북윤석열퇴진대학생행동 관계자들이 지난날 29일 전주대학교 정문 앞에서 ‘윤석열 정권 퇴진! 전북지역 대학생 시국선언’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고 민생을 돌보지 않는 현 정권에게 더 이상 우리 청년들의 미래를 맡길 수 없다”며 “앞으로 이 나라를 살아갈

청년 대학생들의 힘으로 우리 지역부터 정권 퇴진이 되는 그날까지 달려가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농업민생 4법 국회 통과 환영”

민주 전북자치도당, “거부권 행사한다면
농민·국민의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 경고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은 지난날 28일, ‘농업민생 4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된 것에 환영한다며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농민과 국민의 거센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여당을 향해 경고했다.

김슬지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수석대변인(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은 지난날 29일 논평을 통해 “농업민생 4법은 250만 농민과 국민의 절박한 요구를 담은 법안”이라며 “대한민국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지난해 양곡관리법 거부권 행사 당시 쌀값을 20만원(80kg) 이상으로 유지하겠다고 약속했으나 현재 쌀값은 18만2,872원으로 폭락, 농민들의 생계를 더욱 위협하고 있다”며 “양곡관리법을 비롯한 농업민생 4법은 쌀값 안정화에 기여해 농촌 경제를 회복하고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농업민생 4법을 두고 ‘농업을 망치는 4법’이라고 비난하며 대통령에게 재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공식적으로 건의했다”며 “이는 농민의 절박한 요구를 외면하고 농업 현실을 왜곡하는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농업민생 4법은 농민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농촌 사회를 회복 시키며, 농업의 미래를 지키는 필수적인 법안”이라며 “윤 대통령과 정부 여당은 더 이상 250만 농민의 절박한 요구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 만약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이는 농업과 농민의 생존권을 짓밟는 행위로 기록될 것이며 농민과 국민의 거센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야당 주도로 통과한 ‘농업민생 4법’은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등 4개 법안이다. /이만호 기자

집배원들의 보건·안전·복지 지원

민주 정동영 의원, ‘우편집배관법’ 발의... 야당 의원 64명 참여

연이은 중부지방 폭설과 다가오는 한파로 인해 우정사업본부가 집배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는 ‘안전보건 특별관리 기간’을 지정할 가운데 집배원의 보건과 복지·안전을 지원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전주시병)은 지난날 29일 ‘우편집배관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법안’ (이하 우편집배관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정동영 의원의 ‘우편집배관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을 위한 법안’은 집배원의 안전 사고 증가와 장시간노동·감정노동 등의 문제에 대한 대처를 위한 제도의 장치를 담고 있다.

이 법안은 △우편집배관의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 계획의 수립·시행 △복지 시설 및 체력 시설의 설치·운영 △건강 진단 및 직업성 질환 의학 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편집배관의 근무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도록 하여 대국민 우편서비스의 질 향상을 이바지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우편집배관법 발의에는 대표발의의 정동영 의원을 포함한 야당 의원 64명이 공동발의로 참여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소속 과방위 위원 11명 전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해 눈길을 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 의원들이 이름을 올렸다.

정동영 의원은 “집배관은 법의 미비로 인해 노동안전보건법 사각지대에 있다”며 “이륜차 안전사고 및 미세먼지, 배기가스 노출, 고강도 노동, 감정노동 등 위험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특성으로 지속적인 사상자가 발생하지만 보건안전과 복지 지원법이 없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정동영 의원은 “각 정당의 64명의 의원님들이 뜻을 함께해주셨다”며 “집배관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 발의를 통한 적정인력과 예비인력 등으로 집배원의 병가 및 연가를 자유롭게 사용하고 안전사고도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복기 기자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전주매일 캠페인